

주거 복지 정책 토론회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또 무슨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국민생활 안정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돼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막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이지요. 잘못된 현상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투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 주거정책은 어디로 가버리고, 부동산정책으로 온통 싸움판이 벌어진 것은 그런 사회분위기가 돼 있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3월 30일 이 정책만 제대로 통과시켜 주면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야말로 주택정책입니다. 부동산값이 안정된다고

우리 서민들에게 주거문제가 바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거정책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주거 하나만은 좀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도 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보고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좀 믿고 안심하고 또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라도 주거안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좋은 정책을 또 발표해주시고 또 충실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내놓고 그것을 반영해서 또 한 차원 더 높은 한 단계 발전된 우리 주택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주거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아주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유익한 자리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름을 대강 우물우물 말씀을 하셨는데 장시아 씨, 이희경 씨, 윤선희 씨 세 분 말씀이 참 칭찬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고 민망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마음먹고 한 정책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직원하면 그렇지요. 주택공사 직원 하면, 그냥 공무원 그러면 좀 뻗뻗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윤선희 씨는 그런 느낌을 싹 지워준 아주 좋은 인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세 분 다 아주 특별히 마음씨가 착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잘 접하지 못하면 별로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삽니다. 돈 속에 파묻혀 살면 사람이 돈에 중독이 돼서 사람이 잘 안 보이고 돈만 보이게 되고, 권력 속에 파묻혀 살면, 대개 조직과 권력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항상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그렇게 사셔서 항상 그런 좋은 마음씨를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다듬어져서 착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외모도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시고 열심히 이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주택정책 관련 수치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있어

그렇게 감사드리고, 우리 최병선 원장님, 분위기를 싹 바꾸어서 영똥한 이야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최병선 원장님께서 소위 부동산 자산 소득,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적절치는 않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경실련에서 한국의 땅값이 1,100조 올랐다고 참여정부 되고난 뒤에. 그게 사실인가요?

(최병선 원장 답변 :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참여정부 올라와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정부통계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수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실련에서 아마 발표한 1,100조에 대해서

는 평균적으로 오른 가격을 전국의 땅으로 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하고 계산 시점하고 마이너스해서 왔는데 실제 오른 지역은 많이 오른 지역이 한 50%이고, 그것을 평균시키면 10%가 올랐다면 10%가 안 오른, 한 5% 미만으로 오른 지역이 95%는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계산해 가지고 내야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땅값이 오fms 것인지 나오는데, 이것은 평균값에 전국의 땅값을 곱하니까 이것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오른 값을 내느냐는 것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참여정부 주거복지 비전과 지난 3년간의 성과라는 슬라이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과 중 1.주거복지비전, 2.지난 3년간의 성과, 여기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주택가격의 전반적 안정세 유지가 있는데, 3년간 8.2% 상승률 물가는 9.3% 상승했는데 전세는 3.1% 하락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그 뉴스 보고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부동산값이 그렇게 올랐으면 주택가격도 엄청 올라야 말이 되는데, 이 주택은 한국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주택인지 허위 보고인지 말이죠.

(최원장 답변 : 전체 시골의 집이든 아파트든 전부 평균내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른 값을 평균 내서 전국의 땅값이든 집값이든 하면 허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150조 올랐다는 것은 60% 이상이 저희가 공평과세 실현하기 위해서 공시 지가를 그 동안에 현실화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집값 오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렬 답변 : 제가 인천의 공무원한테 말씀 드렸더니 공시지가를 올려야만 땅값도 올라가고 부자들이 살고 세금도 많이 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은 빌라나 굉장히 밀집지역 같은 데에는 빌라 값이 내려간 경우도 있고 부도도 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매입임대나 매입주택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달동네 재개발에 저희 땅이 한 160만은 됐었는데 분양가로 650만원, 7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값이 무지 많이 올라가고 또 그것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아파트 값이 올라간 것은, 죄송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부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에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지방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많이 개발된 데에는 천안, 아산 이런 지역이 개발지역에 투기수요 같은 땅값을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사고팔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어렵죠. 인식이 전혀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 적어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부동산에 관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보았던 통계는 우리나라의 공공 비축주택, 주택의 공공 비축 비율이 OECD의 가장 낮은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런 통계부터가 정부재정지출 중에서 주거비 지원이 제일 적다는 통계를 보고 있듯이 통계를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책임 있는 연구단체라는 데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과학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과학성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주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누군가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아직까지도 25평 정도로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그거 참 그럴 듯한 말인가 싶어서, 저도 부자니까요.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인데 국민주택 규모를 25평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그거 30평 넘겨야지 했더니 30평형 하면 실제 실평수는 25평 정도밖에 안 되게 돼 있

고, 그리고 그 수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숫자가 아주 적더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최저 주거기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25평형은 아주 훌륭한 주택에 속하는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사정을 실제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4평짜리 짓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와 보니까 14평짜리 모델을 내놓고 저한테 구경시키는 것을 보니까 수요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박한용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행정의 조직에 관해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시다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박종열 대표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게 반영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반영돼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것은 참여정부로서는 그건 좀 따지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견 사실과 좀 다르지 않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꼼꼼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권도엽 실장께서 임대주택 수요 재조사를 07년부터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하면 되지 왜 0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을 몇 년까지 5만호 하고 전세임대를 4만5천호 하고 이런 공급계획이 쪽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숫자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비축 분, 한국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비축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박종렬 답변 : 지금 장기임대주택은 재고로 38만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33만호를 주공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2.7%가 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거나와 주택이 투기대상이 된 문제에 대해서, 투기대상이 돼 있는 현상에 대한 시장 가격의 견제 효과도 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공급 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가격폭등 현상이라든지 투기현상을 좀 견제할 수 있지요, 공공주택을 가지면 말입니다

우리가 15%를 목표로 하면 앞으로 10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10년 안에 약 15%의 공공주택 비축분을 가지게 된다는 말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국민들한테 계속 공약을 하세요. 국민들 마음속에 그리고 주택문제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머리 속에 이것이 꼭 도장이 박혀야 누구도 이것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김병준 실장이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른 얘기 들으면 김병준 실장이 정책의 일관성 얘기 하면 정책실장 계속 해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웃음)

그런데 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국민들 모두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로서 자리 잡았을 때 아무나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 비축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그것이 정당한 목표라고 인식하게 하고, 반드시 어떤 정당이라도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 목표에 대해서는 흔들 수 없는 부동의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재정능력에 맞춘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임대운용과 차익금 사이에 역금리가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할 때 이 비용은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비율은, 그것도 한국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더 확실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예산에까지 획기적으로 이 부분은 올려서, 말하자면 소위 기초금액을 올려서 그 다음부터 지출을 깎아버리지 못하게 아예 베이스를 한 단계 높여놔야 그 다음에 이것이 못 내려가지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주택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의 수요를, 말하자면 정책의 수요를 먼저 전제하고 수요를 채우기 위한, 수요를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정책을 맞춰가지를 못하고 돈의 재원 조달, 재원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에 발상의 대전환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각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운용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재정에서 몇 % 중, 이것을 항상 하게 되는데 건설교통부 다른 어떤 예산을 깎더라도 반드시 주거정책의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공공 비축부문도 빨리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과감하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불변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앞으로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항상 가치를 유지하는 최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사시고요, 운용하는 과정에서 역금리,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만큼 그것은 건교부 장관이 책임지시고요. 건교부 예산 갖고 부족하면 우리 부총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도의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때 확실하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재원 확실하게 마련하고.

오늘 제가 정책보고를 받으면서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주택공사도 그렇고 참 애 많이 썼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정책의 내용이 좀 다양한 것 같고 수요자들의 현실에 맞게 아주 꼼꼼하게 잘 설계된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아주 우수한 모범적인 직원까지 왔는데, 미안하게도 이름을 내가 금방 기억을 못했습니다. 잘됐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느낌에 저것 저래가지고 해결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10년 가면 공공비축부문이 15% 간다고 하시니까 되겠구나 싶기는 한데, 처음에 5만호, 4만5천호 이런 얘기 들을 때에는 우선 주거의 심각한 단칸방 살이가 113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 언제 해결되겠나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양적으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저 시끄럽지 않다고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단칸방, 옥탑방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양적으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조사는 조사이고 좀 더 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선 잠정적인 조사라도 해 가지고 2007년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짤 때는 확실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사장님한테 내가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간이 작은지 직원들이 보고서를 안 쓰는지. 하여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돈 빌려다 써라, 정부가 뒷감당 해 줄 테니까. 1년

이라도 빨리 해야지요. 딱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다음에는 못 끌어 내립니다. 이때 그냥 우리가 해치웁시다. 임기 뭐, 주택공사사장 내 하는 것 아니죠? 임기 중에 합시다. 그래서 재정능력에 맞춘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합시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현상이 우리 뉴스를 전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주택에 관한 모든 뉴스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1%도 안 되는, 1% 보다 훨씬 적은 지역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얘기가 전 국민들의 주택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 왜 계속 우리 신문, 방송에는 집장사 얘기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말하자면 25% 수준의 최저 기준 미달의 주거가 있고 113만의 심각한 단칸방 생활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화면에서 봤듯이 산동네,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불량주거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몇몇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그것만 왜 우리 뉴스를 그렇게 저녁마다 장식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해결할 조직적 기초를 확실히 다져야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는 거대한 부동산투기로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이만큼 강화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과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소박한 서민들의 세력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오늘날 여론의 마당에서 뉴스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저도 대통령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의 세력관계, 힘의 균형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머리를, 지혜를 동원해서 이 상황들로부터 우리 서민들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 부총리님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

이. 복지, 건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것은 해냅시다. 이것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말하고 장관이 지시한다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확실하게 실무적으로 이 일을 꾸려갈 수 있는 조직을 정부 내에 튼튼하게 뿌리를 만들어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환용 학회장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주거복지 본부. 이것을 조직을 대폭 확대하든지 필요하면 청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수 백 명 자리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밥그릇 함부로 못 갈아치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제가 험악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누가 중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할 때 조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한 조직이 전국적으로 각 지방 자치체와 함께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조직과 중앙정부의 이 조직이 지방에서 직접 대화하고 연계해 가면서 전국적인 주택정책을 함께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조직까지 함께 정비하는 것, 이 부분까지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적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나갑시다.

지금 보니까 주택공사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수익을 항상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익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사업 같은 것은 제대로 힘을 더 확대되거나 힘을 쓰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제대로 해 가려면 주택공사에서 떼내던지 안 떼내려면 주택공사의 이 사업부의 회계를 독립시켜 줘야 합니다. 간접비 같은 것은 전부 주택공사 수익사업에 다 보태고, 직접비만 해서라도 이것은 회계에서 독립시켜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주택공사의 손실이 계속 나고 맨 날 평가 때 공지하고 빨간불 켜지지 않게 회계를 독립시켜서 평가에서 제외해서, 이 평가기준을 특별히 따로 만들게 한다든지 제외시켜 주는 조직의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그렇죠? 우리 한 선생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특별사업부로 독립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문제 뿐 아니라 복지문제 전반에 관해서 지금부터 꼼꼼히 챙길 것

사실 지난 3년 동안 이런 저런 성과라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보기 따라 참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경제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속에서 매몰돼서 거의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위기론, 즉 경제위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했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내놓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기름 값이 좀 걱정되고 환율도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경제가 넉근하게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버텨나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이하 책임자들이 대책을 함께 세워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유시민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거문제 뿐만이 아니라 복지문제 전반에 관해서 지금부터 꼼꼼히 부지런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별 성과가 안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0년을 좀 더 앞당겨서 7-8년 뒤에라도 우리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책임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고 또 말씀 보태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